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올인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보도자료 2015. 5. 18 || <http://hanbyun.org> Tel : 02-533-8967 || 김태훈 010-9077-6759

북한의 반인도적인 생명권 침해 규탄과 북한인권법 제정의 강력 촉구 **-제32차 화요집회**

일 시 : 2015. 5. 19.(화) 11:30-12:30

장 소 : 광화문 동아일보사 구옥 앞(지하철 5호선 광화문 역 5번 출구 옆)

- 지난 4월말 북한의 군 서열 2인자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체포된 지 사흘만에 재판절차도 없이 고사총으로 잔인하게 공개처형 당했다는 소식은 세계를 경악시킴. 이미 북한 김정은은 집권 3년 5개월 동안 노동당과 정부, 군 간부 등 70여명을 지시 불이행 등 이유로 총살했다고 함.
- 공개 처형 방식은, 처형 대상자의 동료, 부하는 물론 그 가족까지 참관시키고, 화염 방사기로 시신의 흔적을 없애기도 하며, 참관인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되며 사형 집행 후에는 소감문을 써서 내야 한다고 함.
- 이와 같은 야만적이고 잔인한 공개처형은 “사형은 유지되는 경우에도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되어야 하고, 권한 있는 법원이 내린 최종 판결에 의해서만 집행될 수 있다”고 규정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 규약) 제16조 제2항에 명백히 위반하고,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심각한 범죄로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7조 제1항 (a)호에서 말하는 살해(murder)죄이고,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
- 인류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러한 끔찍한 반인도적 범행은 그 대상자의 생명권은 물론, 그 목불인견을 참관토록 강제당한 관중, 특히 그 가족에 대한 인격권 등 기본적인 인권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
- 이러한 세계 최악의 인권상황에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구하고자 「올인모」와 「한변」은 올바른 북한인권법 제정촉구를 위한 제32차 화요집회를 개최.
-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음악회로 진행. 소프라노 송윤재 교수, 지휘 김한준 교수 등 출연.
- 최초의 북한인권법 발의자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정치범수용소 출신 탈북민인 강철환, 정광일 등을 비롯한 200여명의 시민단체, 북한인권단체, 애국시민이 대거 참석 예정.
- 특히 이번 화요집회에서는 ‘이순실’씨 등 채널 A “이만갑” 프로 출연 탈북 미녀들이 아래 내용의 팸플릿을 교부하면서 서명운동도 펼칠 예정.

[팸플렛]

언제까지 외면하시겠습니까?
올바른 북한인권법 서명 운동에 동참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세계 최악의 인권상황에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구하고자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올인모)에서 서명 동참을 호소합니다.

유엔 총회는 역사적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에 따라(별첨 요약 발췌문 참조) 작년 12월 북한 최고 지도부에 의한 반인도적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116개국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고, 이어 안보리는 이를 정식의제로 채택하였습니다. 또 유엔은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감시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현장사무소(field-based structure)를 한국 서울에 두기로 하여 그 설치가 임박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인권 문제가 무관심 속에 냉대받고 있고, 특히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은 2004년에, 일본은 2006년에 제정, 시행하고 있음에도 국회는 10년 넘게 방치하여 인류의 보편적 가치실현을 등한히 하고(세계인권선언, 보호책임의 원칙 참조),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 북녘동포의 고통을 외면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헌법 제3조 참조). 북한인권의 개선이야 말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의 전제이므로(헌법 제4조 참조), 통일 한국의 주인을 자처하는 국민이라면 이러한 국회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일부 정치권에서 대북지원에 편중되고 실질적으로 북한 독재정권의 기반을 강화시켜주는 법률 북한인권증진법 등의 이름 아래 제시하고 북한인권법의 내용을 희석시키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러한 움직임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록·보존하여 통일 이후 형사처벌을 경고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고, 북한인권 개선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수립·추진하는 민관합동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며,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포함된 내용의 올바른 북한인권법이어야 합니다.

이에 작년 1월 60여개의 대표적인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은 올인모를 결성하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함께 이러한 올바른 북한인권법의 제정운동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는 무고한 주민들이 재판도 없이 처형당하고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있습니다. 또 기아와 박해를 피해 중국 등에서 떠도는 수많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북한과 중국의 공안당국에 체포되어 계속 강제 복송되고 있습니다. 거둬 애국시민들 여러분께 국제적 고립의 자초와 내부 불안정성으로 침몰해가는 북한에서 신음하고 있는 동포들을 구출하기 위한 올바른 북한인권법 제정촉구 서명운동에 앞장 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80.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유린이 북한정부 기관과 관리들에 의해 자행되었으며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밝힌 인권유린 사례 가운데 다수가 반인도범죄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권유린은 단순한 국가권력의 남용이 아니라, 북한이 표방하는 건국이념과 동떨어진 정치체제의 본질적 구성요소다. 북한의 인권유린은 그 심각성과 규모, 성격 면에서 현대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 20세기 정치학자들은 이러한 유형의 정치조직을 전체주의국가로 규정한다. 전체주의 국가는 소수집단에 의한 권위주의적 통치를 확보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국민 생활의 모든 측면을 지배하고 내부적으로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다.

(80. Systematic, widespread and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have been and are being committed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ts institutions and officials. In many instances, the violations of human rights found by the commission constitute crimes against humanity. These are not mere excesses of the State; they are essential components of a political system that has moved far from the ideals on which it claims to be founded. The gravity, scale and nature of these violations reveal a State that does not have any parallel in the contemporary world. Political scientists of the twentieth century characterized this type of political organization as a totalitarian State: a State that does not content itself with ensuring the authoritarian rule of a small group of people, but seeks to dominate every aspect of its

citizens' lives and terrorizes them from within.

94.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국제사회와 유엔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94. With regar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United Nations, the commission make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 (a)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여 그 재판소의 사법적 조치를 받도록 한다. 또한 안전보장이사회는 반인도적 범죄에 가장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자들에 대해 표적 제재를 채택한다. 일반 주민들의 비참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주민이나 북한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각국이 취한 제재조치를 지지하지 않는다;
- (a) The Security Council should refer the situ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for action in accordance with that court's jurisdiction. The Security Council should also adopt targeted sanctions against those who appear to be most responsible for crimes against humanity. In the light of the dire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 of the general population, the commission does not support sanctions imposed by the Security Council or introduced bilaterally that are targeted against the population or the economy as a whole;}
- (b)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보다 앞서 만들어진, 북한인권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는 메커니즘을 연장한다. 여기에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권한뿐만 아니라 유엔 사무총장과 인권최고대표의 정례보고가 포함된다. 그러한 메커니즘은 특히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에 중점을 두도록 임무를 받고,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의 이행에 대해 보고한다;
- (b)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Human Rights Council should extend the country-specific human rights monitoring and reporting mechanisms o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at predate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ission; these include the periodic reports of the Secretary-General and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s well as the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uch mechanisms should be mandated to focus on ensuring accountability, in particular for crimes against humanity, and should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mission's recommendations;}
- (c)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인권이사회와 총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북한의 인권유린, 특히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유린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조직을 갖춘다. 이러한 조직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증거 수집과 문서 작업을 기초로 하며, 그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한다. 이 조직은 인권침해 피해자와 증인들을 지속적으로 접견할 수 있도록 현지에 충분한 인원을 배치하여 현장 중심으로 운영한다. 또한 이 조직은 인권보고 메커니즘의 작업성과를 알리고 이해당사자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한편, 반인도범죄에 대해 가장 책임이 있는 자들을 기소하거나 그 책임을 추궁하는 유엔 활동을 촉진한다;
- (c)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with full support from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the General Assembly, should establish a structure to help to ensure 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particular where such violations amount to crimes against humanity. The structure should build on the collection of evidence and documentation work of the commission, and further expand its database. It should be field-based, supported by adequate personnel deployed to the region so as to enjoy sustained access to victims and witnesses. In addition to informing the work of human rights reporting mechanisms and serving as a secure archive for information provided by relevant stakeholders, the work of such a structure should facilitate United Nations efforts to prosecute, or otherwise render accountable, those most responsible for crimes against humanity;